

## 화폐금융교육에서 주류경제학 이론\* 비판과 자유교양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 Critique of Mainstream Economics Theory and Necessity and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on Currency and Finance

김봉률 Kim, Bong Youl\*\*\*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조교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양적 완화를 통한 자산 버블 경제는 자유교양교육으로서 화폐금융교육 필요성을 강력하게 보여준다. 이 글은 기존의 교양교육으로서 주류경제학 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학원론 교육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목표로 하는 경제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자유교양교육적 목표에 부합하게 화폐금융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고자 한다. 자유교양교육으로서 화폐금융교육은 신고전주의를 비롯한 주류경제학에서 단지 상품교환의 매개물로만 보았던 '화폐'를 사회의 가치와 교환을 정초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본다. 이렇게 볼 때만이 금융위기나 불안정, 그리고 금융의 세계화로 벌어진 문제를 읽어낼 수 있다. 자유교양교육은 화폐와 금융에 대한 근본 물음을 통해 '화폐 민주화'와 '좋은 삶'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핵심 주제어: 자유교양교육, 화폐금융교육, 주류경제학 비판

\*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대상은 신고전주의와 통화주의이긴 하지만 새교전학파, 신고전주의 종합, 새종합, 세계인즈학파 등 주류경제학 내 다양한 학파를 분별해서 언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류경제학으로 통칭하여 논한다.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경제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대학교양교육으로서 화폐교육"으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수정하였습니다.

\*\*\* kim-bongyoul@hanmail.net

# I. 자유교양교육과 화폐금융교육의 필요성

## 1. 경제(학)교육에서 자유교양교육의 필요성

학부 교육은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교육이 전문 훈련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교양교육은 인간으로서의 일반적인 교양과 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교양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다. 일반적인 교양이란, 한편으로는 전공을 쉽게 설명하거나 취미나 특기 소양 관련 교육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가치지향적이며 삶의 방향과 윤리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다. 후자를 자유교양교육이라 할 수 있다.

전공교육이 깊이는 있으나 좁은 범위의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거라면 자유교양교육은 명확히 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생각”의 질문과 토론에 초점이 맞추어진다(David Colander and KimMarie McGoldrick, 2009). 대개 경제학 교수나 연구자들은 “넓은 범위”의 교양교육에 대해서 피상적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큰 생각” 질문으로 토론하고 고뇌하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고 평생학습자를 창출해내는 촉매자 역할을 한다.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학)관련 교양교육은 이론중심이나 경험중심이나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이론중심, 즉 학문중심으로 경제학원론을 다루는 경제학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문제나 학생들의 경제적 경험과 관련된 문제 중심의 교육이다. 대학에서의 교양 경제(학)교육에 대한 논쟁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대학 경제학원론 교육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불붙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아직도 경제학원론을 바탕으로 수업하는 전공기초가 교양경제학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다만 경제문제나 경제적 경험과 관련하여 경제교육을 해야된다는 주장이 점차 많아지고 있

다(성효용, 2003; 최종민, 2011).

이 글은 기존의 교양교육으로서 경제학원론교육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목표로 하는 경제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자유교양교육적 목표에 부합하게 화폐금융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고자 한다. 자유교양교육으로 화폐금융교육을 교과목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신고전주의와 통화주의를 비롯한 주류경제학의 화폐금융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실 경제의 위기와 문제를 현실적으로 인지하여 자신의 경제적 삶을 보호하며, 대안 정책을 검토, 요구할 수 있는 경제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교육의 위기와 엘리트의 위기를 읽고 있었다. 하버드대학의 교육이상은 자유시민의 양성에 있다(스티븐 핑거 외, 2012).<sup>1)</sup>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기술들의 등장에 따른 학문습득 방법론의 변화와 함께 신자유주의 시대 엘리트 지식인의 도덕적인 해이 문제가 대두되었다. 오랜 작업 끝에 하버드 대학은 2009년 교양교육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하버드 교육은 자유교육이다”라고 선언하였다(Faculty of Arts and Sciences, 2007). 자유교육의 내용은 우선 “주체의 적절성이나 직업적 유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유로운 탐구정신으로 실행하는 교육”이다. 자유교육은 금융엘리트의 탐욕에 대해 비판하며 이를 막기 위한 교육인 동시에, 주어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현실에서 자기에게 가장 이로운 것을 골라가는 합리적 엘리트들에 대한 비판 교육이다.

이기적인 합리적 금융엘리트가 경제학 교육을 통해 양성된 배경을 살펴보자면, 가치를 배제하고 양적인 문제로 화폐를 파악하는 주류경제학의 화폐금융이론이 그 바탕이었다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통화주의를 중심

1)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자유 사회의 교양교육』이란 이름의 책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시민이 될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교육하여, 그들이 미국인이고 자유인이기에 갖는 책임과 혜택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교육목표를 선언하였다.

으로 한 주류경제학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경제정책, 특히 금리통화정책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그 결과 부의 양극화 심화와 잦은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체제적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유교양교육에서 주류경제학의 경제학원론에 나타난 경제교육의 가설과 학문적 체계, 그리고 주입된 가치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주어진 사회 경제적 현실을 의문시하고 비판적이며 분석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사태로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를 급격하게 양적으로 완화하자 한편으로는 실직과 가난으로부터 민생을 해결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긍정적 역할 못지않게 가공할 자산버블과 자산불평등이 초래되었다. 우리나라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난 영끌현상은 2030 청년층의 경제적 공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균형있는 화폐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따라서 이 엄중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서 기존의 주류경제학의 정태적 화폐금융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비주류로 분류되어 경제학교육에서 배제되었던 정치경제학, 탈자폐경제학 등을 원용하여 다원화된 관점으로 보다 현실에 작동하고 있는 화폐금융경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2. 주류경제학 화폐금융 이론 비판과 자유교양교육으로서 화폐금융교육의 필요성

직업교육과 전문성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갈망이나 사회에서 성공의 잣대인 ‘부자되기’는 우리 사회의 강력한 요구이다. 즉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적 성공이 매우 중요하고 화폐의 획득은 그에 대한 증표가 된다. 1980년대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성공의 갈망은 화폐축적을 통한 부자되기의 갈망이었다.

화폐금융정책은 기본적으로 부채를 지렛대(레버리지)로 하여 돈을 버는

전략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양적 완화였다. 부동산에 들어간 가계의 부채 위기에서 촉발된 2008년의 금융위기가 해결되고 나서도 가계나 기업의 부채는 더 늘어나 금융위기는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빚을 지고 사는 '부채인간'(debted human)은 현대 인간의 존재론으로 이 사회의 전형이 되었다. 그래서 경제학원론이나 경제적 이슈 중심의 경제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의 경제적 사고와 행위의 전망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9년에 하버드 대학의 교양교육 개편을 주도한 학장 해리 루이스(Harry Lewis)가 하버드 학부교육 강화의 핵심을 교양과목에 두고 개편의 취지에 덧붙이고자 한 가치에 대해 살펴보자. 루이스는 기존 교양교육의 가치에 새로이 추가되어야 할 실제적 가치로 ①단기간의 이익과 만족을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인 생각 ②기후변화와 지구의 미래 ③지속가능한 에너지 ④ 분기별 이익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 등을 내세운다(2012: 46-47). 추가되는 새로운 가치는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다. ②와 ③은 생태계의 파괴와 온난화로 이끈 경제 성장에 대한 의문이고 ①과 ④는 탐욕적인 돈벌이에 대한 경고이다. 자신이 남보다 좀 더 짧은 기간에 돈을 좀 더 벌려고 하는 욕심이 세계(지구와 다른 사람들)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엘리트들의 자제와 도덕심을 촉구한다.

단기 이익을 좇아 슈퍼컴퓨터의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자본가와 최고 엘리트들의 합리적 경제 행동은 금융버블을 일으키고 금융을 붕괴시킨다. 전 세계가 휘청인다. 기성세대의 자본력과 금융의 세계화가 전 세계의 청년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내몬다. 따라서 '돈' 교육은 단지 실용적인 지식으로서, 그리고 언제나 보편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진실인 경제학원론 중심의 교양교육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경제교육이나 경제학교육이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교육이 거의 부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주류경제학 이론에서는 화폐가 현재의 경제에서 실물경제 못지않게 경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치를 계산하거나 교환하거나 저장하는 매개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대다수 대학의 경제(학)교육이 그 이론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주류경제학 이론의 본질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화폐가 단지 상품의 매개물에 불과하다면 가치는 상품에 내재하게 된다. 상품을 가진 자와 화폐를 가진 자가 서로 교환을 할 때의 동력이 상품에 내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노동가치설과 효용설로 뒷받침된다. 아담 스미스, 리카도, 마르크스 등의 고전학파는 상품의 가치가 노동에 있다고 본 반면에 신고전주의는 상품의 가치는 소비의 만족도, 즉 효용에 있다고 보았다. 신고전주의는 소비자로서 주어진 조건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존재의 조건을 정당화했다.

레옹 발라스(Leon Wallas)도 일반균형이론(general equilibrium theory), 즉 시장의 수요공급의 균형이론에 의해 가격은 결정되고 서로 교환되므로 화폐는 단지 중요하기는 하나 거래의 매개물로 도구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주류경제학의 화폐금융이론은 통화주의로 등장한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으로 대표되는 통화주의는 재정정책의 적극적 운용을 반대하고(1994: 239) 통화정책을 옹호한다. 자유방임과 시장의 자율성을 주장한다. 통화주의자들은 통화량은 양적 조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일 뿐 소득격차나 심한 자산버블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주류경제학의 주장과 달리, 사회 공동체적으로 볼 때, 매개물로서의 화폐가 지닌 가치는 전혀 의미가 달라진다.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2011)은 “교환의 두 당사자 사이에 제3의 심급(審級), 즉 공동체 전체라는 심급이 개입하며 이 공동체가 돈에 상응하는 실제 가치를

제공'해준다고 본다. 이마무라 히도시(2011) 역시 『화폐인문학』에서 “인간 이 복수의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숙명적, 근원적 사실이라면 ... 교환 가능성의 조건이자 교환의 결정화인 화폐 또한 인간에게 숙명적이고 불가 피”한 것으로 매개가 지닌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 매개가 무너질 때 공동체도 무너진다고 본다.

화폐는 그것이 귀금속이든 지폐이든 내재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적 판단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앙드레 오를레앙 (Andre Orlean)(2016: 26)은 『가치의 제국』에서 화폐는 단순매개물이 아니라 (상품의) 가치와 교환을 정초하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본다. 더구나 공동체적 역학관계의 영향을 매우 받는 “모순적인 관계이고 세력관계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언제나 불확실한 것”이다(오를레앙, 2016: 19). 이런 점에서 보면, 경제학원론에서 자원제약 개념에서 출발하는 ‘희소성의 원리’나 완전 균형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넘어서는,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화폐에 대한 더 깊은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화폐금융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화폐와 국민경제’가 경제교육의 3대 주제(김준태, 2014: 675-726)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경제학원론 수업이 대세로 이루어지면서 화폐 금융에 대한 교육은 실질적으로 ‘주어진 문제기반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내는 교육중심의 재무관리나 금융소비자교육에 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화폐와 금융은 단지 매개인 외생변수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추동해내는 핵심기제라 본다. 나아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금융위기가 불안정, 그리고 금융의 세계화로 벌어진 문제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 장차 경제정책 입안자로서, 혹은 교사나 교수로서 성장할 청년세대의 경제윤리와 가치관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의 인생계획에서도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

## II.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기존 경제학교육과 경제교육에 대한 고찰

### 1. 주류경제학의 경제학원론으로 수업하는, 기존 경제(학)교양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 대학 교양과목으로서 경제학원론 강의 실태

경제학원론을, 학적 체계는 갖추나, 좀 쉽게 설명하는 수업은 대개 전공 기초이자 교양선택과목으로 주어진다. “경제학개론”이나 “경제학원론 입문”, 아니면 그냥 “경제학원론”으로 교과목이 정해진다. 경북대의 경제학개론 교재로 쓰이는 『알기 쉬운 경제학』의 서문을 통해,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가장 일반화된 입문적 성격의 경제학 수업의 실태를 살펴보자(김상규 외, 2013). 머리말에서 소개하는 책의 내용은 주로 ‘고등 소양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경제 기초지식’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론적 차원에서는 경제학원론과 다르지 않으나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서술하면서 분량을 좀 줄이고 난해한 그래프나 수식을 많이 없앴다고 한다. 하지만 교양입문적 성격으로서 이 책은 경제학 원론의 기초 이론을 소개하는 교재라 할 수 있다. 서울대의 “인간생활과 경제”, “경제학개론”, 경북대의 “경제의 이해” 등의 과목들 역시 이와 유사하다.

현재 입문적 성격의, 대부분의 경제학 과목은 전공기초필수 교재로 쓰이는, 신고전주의인 미국 경제학자 폴 사뮤엘슨(Paul Samuelson)의 『경제학원론』(Principle of Economics)을 답습하고 있다. 경제학원론은 희소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주어진 제약조건에서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해명하는 학문’이라 한다. 사뮤엘슨 이후 반 세기가 지나고 여러 분파가 생겨나긴 했지만 이 정의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다만 1997년에 『맨큐의 경제학』이 총천연색으로 인쇄되고, 각종 사례



와 신문기사를 동원해 경제 현상을 알기 쉽게 풀이하면서 경제학의 바이블로 떠오르고 있다. 좀 더 쉽게 현실경제학과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대중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사무엘슨이나 그레고리 맨큐(Gregory Mankiw)와 같은 주류경제학자들의 책들만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거의 유일한 경제학으로 대학에 가르쳐지는 이유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인데 그 핵심 내용은 ‘경쟁의 효율성’과 ‘행위자의 합리성 모델화’이다. 하지만 현재 이 이데올로기가 지닌 유해성이 위험하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런데도 대세를 계속 차지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경제학을 과학’이라 보기 때문이다. 라이오넬 로빈스(Lionel Robbins)(2019)는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지닌 속성과 중요성』(*An E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에서 경제학을 “대체 용도를 가진 (주어진) 목적과 희소한 수단 사이의 관계로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2019: 15)으로 정의하면서 과학성을 획득한 경제학에 방점을 찍었다. 맨큐는 “경제학자들은 과학자인 척하는 걸 좋아한다. ... 학부생들을 가르칠 때 나는 의식적으로 경제학을 과학의 한 분야로 묘사한다”고 한다(2006: 1). 이에 대해 장하준은 언젠가부터 경제학이 화학이나 물리학처럼 한 가지 답만 존재하는 과학이라 여겨지도록 유도되었다 한다(2014: 14). “화학에서 다루는 분자나 물리에서 다루는 물체와는 달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장하준, 2014: 15)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다루는 경제학은 결코 한 가지 답만을 지닌 과학이 될 수 없다고 장하준은 비판한다.

앞서 하버드 대학의 자유교양교육의 취지라 할 수 있는 ‘가설에 대한 의문, 자기성찰 유발, 역사적 계기와 문화적 경험의 만남에서 생기는 소외감 극복’ 등이 진정한 자유교양교육의 핵심적 취지라 할 때 이러한 주류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체계화한 경제학원론 수업을 학부강의에서 교양교육으

로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한 가장 단적인 예는 맨큐 교수에 대한 항의다. 2011년 11월 2일 미국 하버드대 샌더스관 앞에 수십 명의 학생이 모여 수강을 거부하고 맨큐 '교수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낭독했다. "당신의 강의는 지나치게 편향됐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경제학은, 미국 사회의 빈부 격차를 영구화하고 세계 금융 위기를 유발한 그 이데올로기 아닌가"(장하준, 2014). 학생들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찾잔 속의 태풍일수도 있지만 수십 년간 노벨상을 휩쓸고 대학의 전공과 교양 강의를 차지한 신고전파를 비롯한 주류경제학이 심하게 도전을 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 (2) 경제학원론의 주류경제학 이론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학원론은 주류경제학 이론체계와 개념틀로 이루어진 경제학 기초이론이다. 또한 경제학원론 교육의 목표는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즉, 작은 경제학자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공기초과목이지만 교양과목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은 매우 어렵고 지겨운 과목으로 정평이 나있다. 주류경제학파의 이론과 개념체계는 학적 체계의 견고함과 체계성으로 19세기말 이후 자본주의의 정통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대부분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고전주의를 비롯한 주류 경제학은 실제로 현실을 떠난, 학문자체의 정합성 중심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매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박명호, 2001). 현실과 소통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자폐적 이론이라는 것이다. 안현호는 경제학원론 교육은 전공교육과 다른, 다원성을 요구하는 교양교육의 이론과 지식체계로는 부적합하다고 본다(2013).

우선, 주류 경제학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희소성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자. 희소성은 흔히 자원제약설이라 할 수 있는 '인간 개개인의 욕망

은 무한한데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희소성은, 오를레앙에 따르면, “시장이 제도화한 특수한 조직화의 형태”이다(2016: 146). 사실 현실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계급, 어떤 나라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반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국가들은 결핍, 부족, 기근에 허덕인다. 평균적으로 나눈다면 굶주릴 것도, 넘쳐서 쓰레기더미처럼 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오를레앙은 이러한 양면성은 상품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며 이것이 희소성의 본질이라 본다. 이러한 희소성의 정의를 따르면, 현 경제학의 가장 기본원리인 희소성이 현재 세계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합리화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희소성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대상을 획득할 수 있는 각자의 능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걸 전제한다. 경제적 행위를 철저히 개인주의화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신고전주의가 상품의 가치를 효용에 두는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효용은 상품을 소비할 때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만족으로, 신고전주의 이론은 소비만을 추구하고 소비라는 정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개인을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으로 설정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살펴보자. 발라스는 상이한 현상들로 구성된 역사에서 변하지 않은 원리들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그는 『순수경제학 요론』(1996)에서 ‘모든 재화의 수요와 모든 재화의 공급은 균형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치한다’는 발라스 법칙으로 불리는 일반균형이론을 천명했다. 미시경제학을 한마디로 ‘수요공급의 법칙’이라 할 정도로 수요공급법칙은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 원리가 된다. 발라스 법칙에 의하면, 모든 시장들이 균형일 때 가치가 결정되고 모든 행위자들, 즉 시장참여자들의 욕망이 동시에 만족된다는 것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1936년에 출판된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불황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유효수요이론이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자동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노동력이 팔리지 않는 실업자, 생산을 멈추고 있는 공장, 팔리지 않고 쌓이기만 하는 물건이 공존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계속될 수 있는가. 그의 의문은 너무나 분명하여 결국 거시경제학의 방향을 수정하게 되는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

발라스가 균형이론을 주장한지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수요공급의 법칙은 미시적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기본 경제원리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수요공급의 완전한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완전 자유경쟁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자본주의 시장은 초국적 기업을 비롯해서 세계적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독과점이 지배하고 있다. 더구나 2008년 금융위기의 해결사인 양적 완화는 균형이론 자체를 파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경제학원론을 바탕으로 한 경험중심 경제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험중심의 경제교육의 목표는 경제적 이슈와 문제기반의 교육을 통해 경제 이해역량(literacy)<sup>2)</sup>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경제교육이 부실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경제는 난해하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이 있어 경제과목을 기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자들도 현실의 경제적 이슈와 문제기반설정의 경제교육을 실행하려면 많은 노력과 열정이 투여되어야 하므로 담당하길 꺼려하기 때문이기

2) 경제 이해역량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것으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다 (<http://dbskjtvt.co.kr/article.php?aid=162072145765255004>).

도 하다. 그래서 경제학원론 개론수업을 손쉽게 교양과목으로 설정한다. 그건 다시 영향을 미쳐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목으로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sup>3)</sup>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이슈와 문제기반의 경제교육은 경제학원론 교육의 지루함과 난해함, 그리고 현실경제를 벗어난 추상적 이론체계의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양경제교육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최병모 외(2005)는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경제교육전문가와 경제 실무가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의 목표를 도출하였다. 그에 따르면, 학교 경제교육의 목표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의 증진, 경제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능력의 함양, 경제적 사고의 생활화, 경제학의 기본원리와 개념을 실생활의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의 함양에 초점을 둔다. 즉 경제 이해역량 함양과 문제해결력 고양이가 목표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경제교육의 방법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제기반학습 방안을 통하여 문제해결력을 길러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김준태, 2014: 696).

대부분의 논자들이 교양과정의 경제교육 목표를 합리적 의사결정에 두고 있듯이 ‘합리적 의사결정’ 학습은 매우 중요하고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학생들은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제대로 배우거나 생활상에서 습득하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한다. 은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고 금리에 따라 이자를 낸다든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차이, 보험이나 연금의 차이 등 이러한 최소한의 산술적 합리성도 무지한 채 대학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제적 경험(예상 포함)과 관련하여 문제기반을 설정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이든 국내적이든 경제적 현상이나 문제들을 읽어내는 경

3) 학제적으로 ‘법과 경제’나 ‘예술과 경제’, ‘기업과 사회’ 등의 과목이 하나씩 개설되기도 한다.

제 이해역량의 함양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교양과목으로서 경제교육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교육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경제학원론의 이론과 개념을 기본 토대로 하여 문제기반을 설정할 경우에 많은 한계와 제한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비판적 성찰력과 새로운 상상력으로 제3의 대안설정이 필요하지만 주어진 문제상황에서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뜻에 걸릴 수 있다. 부채의 문제를 두고 볼 때 많은 빚을 지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이익이 될 수도 있는 합리적 상황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그 순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한 인간의 인생 전체에 걸친 장기적 상황에서도 과연 합리적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순간은 이익이지만 금전적 복속의 상태는 채무노예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하버드 졸업생들의 월스트리트 금융가의 탐욕에서 보듯이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주어진 조건에서의 이기적 행동윤리로 자유교양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다.

오랫동안 재임한 연방준비위의 의장이자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 가운데 매우 주요한 일인이라 할 수 있는 앨런 그린스펀(Allan Greenspan)은 *BIS Review*(2001)에서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이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고 자주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금융교육적 상황에서 ‘금융교육을 받고 아니 받고의 차이가 결국 소득격차, 나아가 세습적 소득격차까지 벌어지게 한다’고 역설하였다. 여기서 그린스펀이 주장한 것은 투자자뿐 아니라 소비자들 역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과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자산관리를 잘 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금융문맹을 타파하여 금융으로 더 많은 투자자와 금융소비자를 데려오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강하다. 결과적으로, 이들 투자자와 금융소비자들은 그린스펀이 부풀려놓은 투자망 속에서 상당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과 몰락

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경제교육은 그린스펀이 말하는 금융교육에 딱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금융경제교육은 금융소비자로서 주식이나 저축, 대출 등을 소비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경제적 현상을 읽어낼 수 있는 도구는 부분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돈이 지닌 모순과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좋은 삶'과 돈과의 관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대체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편이다. 합리적 선택의 결과,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직장 다니면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30대의 남성이 집 대출 담보 90%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집을 잃고 가족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위험도 충분히 상존한다.

경제학원론의 이론체계와 개념 틀에서의 경제 이해역량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합리적 의사결정 또한 이와 비슷하다.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보다 비교우위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고 싶은 것을 사며, 은행 대출로 사업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와 풍요로움과, 그냥 직장 월급으로 만족하는 소시민적 삶이 비교대상이 된다. '좋은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으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된다. 합리성을 절차적 합리성과 성찰적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으로 나뉘볼 때 주류경제학이 강조하는 것은 도구적 합리성이라 볼 수 있다(신준호, 2005). 이에 비해 안현효(2005)는 경제교육의 3번째 목표로서 사회공동체와 경제적 사회화의 개념을 통해 개인주의에서 좀 벗어나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관의 획득 역시 경제교육의 주요한 목표임을 제시하고 있다.

### III. 화폐금융교육의 방향과 내용

자유교양교육은 우선 학생들이 현재 경제사회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직장이나 실생활에 유용한 기본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도외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어진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전문화하는 것을 넘어 정치경제적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비판적 능력도 기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자유교양교육으로서 화폐금융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크게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화폐금융의 역사와 이론”, 2부는 “화폐금융의 정치경제학”, 3부는 “화폐의 민주화와 좋은 삶”이다. 1부와 3부는 간략히 소개하고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2부에 관한 것이다. 1부는 기존 화폐금융의 역사와 이론에 관한 것이므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3부 역시 중요하지만 지면상 마무리 결론 부분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1부 “화폐금융의 역사와 이론”은 “화폐와 금융의 역사”와 “화폐금융이론과 작동원리”로 구성된다. 화폐금융의 역사는 실물화폐에서 신용화폐로의 이행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것은 실물에서 해방된 화폐가 현재 일으키고 있는 거품경제와 금융위기, 그리고 화폐체계에 대한 불신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1부 후반부 “화폐금융이론과 작동원리”는 대부분 현재 교양경제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주류경제학의 화폐 금융이론에 관한 소개와 비판적 검토에 할애한다. 합리적 의사결정과 경험적 경제적 이해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요공급의 원리, 금리와 채권, 주식, 환율, 부동산과의 관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관해 익히고 숙지한다. 케인즈주의와 프리드만의 통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20세기의 경제 속에 드러난 정책의 성공과 실패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2부 “화폐금융의 정치경제학”은



경제를 정치나 사회와 무관한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호모이코노미쿠스적 편협함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세계시민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과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내용과 교육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폐신용제도는 도구적 중립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통화주의를 비롯한 신고전주의 화폐금융론의 ‘화폐중립성’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기본기제로서 능동적 작동자로서 화폐를 고찰한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안정은 이 화폐신용제도로부터 기인하며 그 핵심은 이자에, 그리고 이자율, 즉 금리에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화폐가 생산에 투자되어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으로서 화폐는 스스로 자립적으로 축적되며, 나아가 화폐는 권력이 된다고 본다. 이와 동시에 금융의 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에 파괴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과 코로나 펜데믹 사태에서 이루어진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불평등의 문제를 고찰한다.

## 1.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으로서의 화폐신용제

신고전주의나 통화주의자를 비롯한 주류경제학은 화폐를 경제에 중립적인 일종의 ‘인위적 창조물’로 파악한다. 화폐는 실물경제과정에서 매개일 뿐이며 따라서 외생변수이다. 이와 달리 마르크스나 케인즈, 오를레앙 등은 화폐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문제라 본다. 자본주의의 기본 작동원리는 화폐를 투입해서 더 많은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선 화폐는 자본으로 기능하면서 실물경제를 작동시킨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화폐를 획득하고 자신의 노동력재생산을 위해 화폐를 소비한다. 하지만 자본가는 노동을 통해 상품을 생산판매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 자본가의 이윤동기이자 출발점은 화폐로부터 비롯한다. 화폐를 생산과정에서 투하함으로써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다. 마르크스의 유명한 도식을 빌

리다면, 여기서 화폐는 G(화폐) → W(상품) → G'(화폐)의 형태변환을 거친다. 우리가 흔히 실물경제(real economy)라고 얘기하는 경제영역은 바로 이 화폐의 형태변환에 기초하고 있다.<sup>4)</sup>

구춘권에 따르면, 화폐는 지불수단으로 기능하여 금융영역을 작동시킨다(2009: 199). 화폐가 없다면 금융도 없다. 이때 지불은 유통수단으로서의 일상적 의미가 아니다. 지불수단으로서 화폐는 '가치실현의 시간적 분리'를 증개한다. 이것은 금융영역의 작동을 말하며 마르크스는 돈이 돈을 낳는 정식을 G(화폐) → G'(화폐)로 표현했다. 이것은 화폐적 축적의 논리이며 금융영역의 작동원리이다(구춘권, 2009: 200).

케인즈에게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문제는 화폐이다. 케인즈는 마르크스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전제는 마르크스와 공유했다. 시장가치 및 가격은 결국 화폐의 형태를 통해 나타나고, 시장관계 및 경제과정은 화폐소유자의 행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다고 케인즈는 강조한다(한영빈, 2008: 13).

이에 덧붙여 오를레앙은 『가치의 제국』에서 화폐는 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기본 기제일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모순과 분열을 구성하는 권력관계의 일부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생산관계 아래서 화폐는 전체 경제의 가치생산물에 대해 일종의 '실체적 대표자'라는 것이다.

---

4) 화폐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전환에 의해 화폐는 주어진 고정적인 가치로부터 자기 자신을 증식하고 증가하는 가치로 된다. 화폐는 이윤을 생산한다. 화폐는 곧 자본가로 하여금 일정한 양의 부불노동, 잉여생산물, 잉여가치를 노동자들로부터 뽑아내어 취득할 수 있게 한다”(Marx, 1968: 350).

## 2. 시장경제의 불안정성과 화폐신용의 ‘이자’

### (1) 수요공급법칙과 화폐

주류 경제학은 시장의 자기조절기능을 신봉한다. 시장의 자기조절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수요공급법칙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 시장은 설령 균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다시 균형을 회복하려는 강력한 경향을 지니기에 시장의 밖에 있는 변수들이, 즉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작은 정부’론은 케인즈식의 재정정책을 반대하며 1980년 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노선의 강력한 이론적 정책적 뒷받침이 되었다.

화폐를 수요공급의 차원에서 양적인 문제로 보는 것은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이나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에게도 해당된다. 물가수준의 변동을 통화량의 변동으로 설명하는 경제이론으로서 화폐수량설(貨幣數量說, quantity theory of money)은 화폐수량의 증가는 가격의 비례적 상승을 가져올 뿐이며 금융행위나 생산과정에 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실물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필요한 화폐량의 공급에 분석을 집중하는,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한 통화주의자들의 이론적 바탕이 된다.

하지만 화폐는 수요공급법칙에 벗어나 있다. 케인즈는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동기를 설명하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투기적 동기로 인한 유동성 선호가 증가할 것이라 지적한다(Keynes, 1936: 86).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이론은 수요공급법칙에 의해서 자산가격이 등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쪽으로 투기적 동기가 더 작동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이에 해당되고 이 자산시장들에서 수요공급법칙은 전체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1990년대 들어 화폐수량방정식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서 통화량을 대신해 화폐의 가격, 즉 이자율이 통화정책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1993년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통화량을 더 이상 통화정책의 지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화폐금융에 대해서 이제 주류경제학이론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 (2) 이자, 시장 불안정성의 핵심

1990년대 들어 주류경제학에서 이자율을 통화정책의 핵심으로 잡았다. 이자율 조정의 문제 이전에 ‘이자’ 자체를 먼저 살펴보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엔데의 유언』에서 보면, 돈은 공공물이다. 이자는 “돈이 공적인 것인데도 사적인 점유자가 사적인 요금을 청구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므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모순이 발생한다(2013: 255). ‘이자’에 대한 원초적인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 이 의문은 3부 ‘화폐민주화와 좋은 삶’의 출발점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는 이윤 생산의 수단이 되는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다(Marx, 1968: 350이하). ‘이자’는 곧 자본주의의 진보, 성장, 발전의 동력이다. 하지만 이 ‘이자’는 시장 불안정성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다. 화폐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이자’를 통해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조형하기도 하고 파탄내기도 하는 파괴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고, 경제시스템 자체를 재건시키기도 하고 붕괴시키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 통화주의의 득세는 재정정책이 아닌 통화량이나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통화정책을 경제정책으로 삼게 했다.<sup>5)</sup> 1980년대에는 볼커가 통화량 조절 정책으로, 1990년대 들어 그린스펀이 금리의 조절로 경기

5) 금리(이자율)는 주류경제학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유일한 연결고리에 해당된다. 통화주의에서 핵심은 통화량이지만, 1979년 볼커의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그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최고 효율적인 수단은 금리일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앨런 그린스펀 이후의 통화주의를 비롯한 주류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정책 조절수단은 금리의 조절이 된다. 엄밀하게 분류하자면 금리중시 통화정책은 새조합의 통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를 조절하고 위기를 타개해나가는 이러한 경제전술은 재정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다른 한편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강화시켜 가계나 기업 등 경제주체를 불안하게 더 흔드는 면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 연준 전 의장 폴 볼커(Paul Volker)의 통화량 정책과 그린스펀의 금리정책이다. 1979년 취임 직후 볼커는 금리를 12%로 인상하고, 이어 1981년에는 20%까지 끌어올렸다.<sup>6)</sup> 고금리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고민없이 통화량만 정책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통화주의 학파 견해를 전격 수용한 결과였다.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은 10%로 급등했다. 일명 금리테러라 불리는 이러한 금리정책은 카터정권에서 이루어진 산업성장을 파탄시켰다(Altwater 1987: 352).<sup>7)</sup> 이로 인해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억압되었던 금융은 미국이 초금리로 돌아서자 복귀를 선언”한다(홍석만·송명관, 2013: 38-46). 이러한 금리정책으로 이자율은 이윤율보다 높아져서 산업이 버틸 여력이 없었다. 통화주의를 비롯한 주류경제학의 이러한 정책은 결국 화폐의 금융영역으로의 투자를 촉진한다. 신자유주의 출발 이후 금융부분의 비대한 지나친 성장을 보게 된다.

이자의 크기(이자율의 높낮이)는 실물경제, 즉 자본주의 축적의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한다(구춘권, 2009: 201). 더욱이 자본가에게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본가는 이자를 지불한 후의 남은 돈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노동 분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시기는 노동의 유연성 정책을 폈고 그로 인해 비정규직은

6)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출범하면서 0.3%에 불과했던 장기실질이자율은 1983년 8.1%로 급상승했다. 1979년 13.3%에 달했던 물가가 1983년에는 3.2%로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은 잡았으나 그 후유증은 무척 컸다.

7) 통화주의의 이러한 정책은 정부 주도로 필요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주거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수요창출을 하는 케인즈주의 재정정책과는 많이 다르다. 통화주의 정책은 자유방임주의로 신자유주의적이며 결코 중립적이지 아니며 자산을 가진 극소수에게는 매우 유리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양산되고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 (3) 부채인간

‘이자’는 사회적 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양분한다. 누군가의 이득은 누군가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게임이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양극화되는 사회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위치 역전은 매우 힘들며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일방적인 사회경제적 관계가 재생산되고 고착화된다. 신자유주의와 통화주의의 득세 이후로 중산층의 몰락이 뚜렷해진다.

중산층의 몰락은 금융부문의 팽창, 그리고 신용위기가 궤를 같이 한다. 마이클 쿰호프(Michael Kumhof)와 로맹 랑시에르(Romain Ranciere)가 펴낸 국제통화기금 보고서 『불평등, 레버리지, 위기』(*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는 ‘불평등 → 레버리지 → 위기’를 정식화한다(2010: 3-8). 불평등이 커지면 중산층은 소득이 제자리이거나 하락하는데도 생활수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부자들의 돈을 빌리고 이를 중개하려고 금융부문이 팽창하여 결국 신용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빚을 레버리지라는 전문용어로 사용하여, 마치 레버리지 즉 지렛대가 조금의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리듯이 조그만 빚을 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대출을 권하고 투자를 조장하였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도 중하층 서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에서 비롯되었다. 학자금대출로 대학을 졸업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직할 경우 이들은 항상 부채에 허덕이게 된다. 전세금대출, 모기지대출 같은 부동산관련 부채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 나아가 휴대폰 할부에도 은행이자율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마우리치오 랏자라토(Maurizio Lazzarato)의 『부채인간』에서 보듯이 현대인의 전형은 부채인간이 되었다. 화폐는 현대의 인간 존재론을 다시 쓴다고 볼 수 있다.

#### (4) 이자와 경제성장,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기후위기

자본은 '스스로 증가하는 가치'이다. 이 자본의 본질은 이자율 책정에 따른 이윤율의 기준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 이자의 문제, 즉 복리기반의 금융시스템이 결국 제로섬 게임과 위기의 세계화로 간다고 마르그리트 케네디(Margrit Kennedy)는 『화폐를 점령하라』(*Occupy Money: Creating an Economy Where Everybody Wins*)에서 말한다. 이 복리기반의 금융시스템을 통해 “최상위 10% 계층 대부분은 90% 사람들의 이자에서 거둬들인 수익으로 다시 금융투자를 하여 재산을 늘린다”고 한다(Kennedy, 2013: 52).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7년까지 일어난 국가 수준의 금융위기는 124회, 통화 위기는 326회, 공공 부채위기는 64회였다. 이러한 크고 작은 위기들은 이자를 받는 화폐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서 나온다고 본다. 케네디에 따르면, 현재 화폐시스템은 자연성장 곡선에서 벗어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2013: 38). 시장은 이자를 기준으로 '수익성'의 높고 낮음을 가늠한다. 투자 수익이 은행 금리보다 높지 않으면 수익률이 낮다고 여겨진다. 무한히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하는 복리 구조는 역시 돈을 기반으로 한 무한 성장을 요구한다.

이러한 무한성장예의 욕구는 결국 이자를 갚기 위한 것이다. 경제성장예에 대한 압박은 자연과 생태계의 급속한 낭비와 파괴로 이어지며 온난화로 기후의 위기를 초래한다. 단기적인 이자의 획득을 위해 장기적인 인류 생존의 위기가 초래된다. 케네디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 자산은 무한 성장해야 하지만 물질 성장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멈추는 패턴을 추구해야 한다고 한다(2013: 35-37).

### 3. 화폐축적의 자립화와 금융시장의 세계화

#### (1) 불평등과 화폐 축적의 자립화

상품교환의 수단이거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주류경제학의 화폐 금융이론에서 화폐축적의 자립화는 불가능하다. 역사 이래 존재하던 고리 대금업도 일종의 자립화이긴 하다. 하지만 고중세 경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자급자족경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런데 화폐를 자본주의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구성체로서 가치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집단의 표상으로 바라볼 때 자립화의 범위와 세력과 그 지위는 달라진다.

마르크스의 도식  $G(\text{화폐}) \rightarrow G'(\text{화폐})$ 에서 보다시피 돈은 스스로 더 많은 돈을 낳는다.  $G(\text{화폐}) \rightarrow W(\text{상품}) \rightarrow G'(\text{화폐})$ 의 형태변환에서와 달리 상품 생산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증식하는 것이다. 상품생산을 거쳐야만 노동이 개입된다. 화폐축적의 자립화는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르크스 시대에 화폐적 축적의 자립화는 그리 크지 않았고 자본은 주로 생산 과정에 묶여있었다. 우리가 금융자본주의라 일컫는 20세기 들어와서 화폐는 스스로 자립하여 축적되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팽창하면서 화폐권력으로 구성되기 이르렀다.

화폐적 축적의 자립화는 소득불평등의 심화에서 출발한다. 금융자본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19세기말 20세기 초 유럽사회에서 대중의 빈곤화는 심화되어가고 있었다. 더구나 1920년대 미국 역시 호황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빈부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부자들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가난한 대중들의 수요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잉생산의 문제를 초래한다. 과잉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생산적 투자를 통해 이익을 증식시킬 수 없다. 자연 부자들의 화폐는 금융영역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 본격적으로 주식회사의 등장과 그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1929년 미국에서 실물경제에는 32억 달러 투자되었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는 870억 달러가 거래되었다. 주식시장의 투자가 바로 주식회사에 투자되지 아니하고 주식과 자본이 서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머니게임의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한다. 즉 화폐가 실물경제에서 해방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이후 금융 세계화가 가속화됨으로써 화폐의 축적은 실질적으로 실물경제로부터 해방된다. 세계화된 금융시장의 거래액은 하루 수조달러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의 하루 무역액의 수백 배를 상회하고 있다.

## (2) 주류경제학 화폐금융이론의 승리와 세계화된 금융시장

1970년대 말부터 등장한 미국의 레이저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은 화폐적 안정을 내세우는 통화주의적 노선으로의 선회와, 수요보다는 공급중심적 경제개입 정책으로의 선회를 의미했다. 이와 더불어 더욱 가속화된 국제금융시장의 급속한 팽창은 “통화주의적 길”이 “케인즈주의적 길”에 대해 이론 승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구춘권, 2000: 300) “화폐적 축적의 자립화는 화폐영역의 발전이 실물영역에 의해 더 이상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화폐영역의 발전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구춘권, 2000: 308). 오히려 이 자립화와 함께 위기의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금융시장의 세계화를 통해 세계는 채권국과 채무국으로 재편되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따라오던 수많은 후발 국가들은 통화주의 노선에 따른 금리인상의 여파와 긴축재정정책으로 흔들리고 파괴되었다. 세계화의 핵심이 금융의 세계화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화폐축적의 자립화가 일국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그 파괴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다. 1980년대 제3세계에 불어 닥친 “외채위기”는 심지어 동구 사회주의권의 경제까지도 초토화시켰고 급기야 1990년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금융위기도 초래했다. 통화주의자가 장악하고 있던 IMF는 고금리 긴축재정의 처방으로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증산층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화폐적 축적이 자립화되어 세계화된 것의 핵심은 자본의 이윤율하락 경향에 대한 자본의 총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홍석만·송명관은 이에 대해 자본은 “생산확대를 통한 이윤의 양적 확대가 어려워지자 이자와 부채, 신용창조를 통해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팽창을 부추기며 지구촌 곳곳에 금융거품을 형성”(2013: 189)하여 “이윤율 하락을 이자량의 증대로 보충하려는 새로운 축적구조”를 발전시켰다고 한다(2013: 190). 하지만 실물경제에서 유리된 화폐적 자립화는 이자율에 따라 움직이고, 연준을 움직이는 통화주의자의 금리정책은 화폐적 금융적 불안정을 가속화시켰다.

신자유주의 정책노선과 결합된 통화주의 정책은 국제적인 영향력 뿐 아니라 미국 자국 내의 금융위기도 초래한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그린스펀이 거의 제로금리로 부추긴 소비 진작과 부동산거품은 급기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터졌다. 세계적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쿤호프와 랑시에르의 주장대로, 노동의 유연성으로 비정규직과 실업상태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대중의 소비력을 저금리의 금융정책과 대중소비진작을 위한 문화적 공세로 부추겨서 빚을 내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대학을 다니는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을 만성적 부채 상태에 빠뜨린 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공격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재정정책이 결여된 통화정책만을 주장하는 통화주의적 노선에 대해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 하지만 통화주의노선의 견지는 프리드먼 등과 같은 경제학자들의 승리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오를레앙이 화폐는 공동체의 역학관계의 영향을 매우 받는 모순적인 관계이며 세력관계의 산물임을 언급

하였듯이 신자유주의의 이념체계로 무장한 자본이 노동에 대해 승리를 거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본은 '거대한 채권자', '포괄적 채권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대다수 사람들은 자본 앞에서는 죄인이자 책임이 있는 자, 즉 '채무자이다(랏자라또, 2012: 26).

### (3) 화폐의 불확실성, 파생상품자본주의와 전자금융공간의 탄생

합리성과 기술진보는 전자금융공간을 만들어냈다. 이 공간에서 초고속 고빈도 거래HFT(High Frequency Trading)가 일어난다. 뉴욕증권거래소의 서버에서는 조금이라도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빨리 접속하려는 사람들이 10억분의 1초를 다툰다. 미즈노 가즈오는 전자금융공간의 탄생은 화폐와 기업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화폐가 안정되지 않으면 지리적 물적 공간의 팽창, 즉 시장의 확대에 전념할 수가 없다.”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해체로 더 이상 달러가 금의 받침을 받지 못함으로써 내일의 화폐가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장의 확대 이외에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했고 그리하여 전자금융공간이 창출되었다고 본다. 더 이상 식민지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없는 상태인 유한성을 무한성으로 확대시켰다고 평가하였다(2017: 128-129).

실물경제에서 자립적으로 축적 운영되던 화폐와 금융은 탈규제의 흐름 속에서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더 강화되었다. 그 보완대책으로 나온 파생상품의 기획과 보급은 급기야 '파생상품자본주의'(Altvater, 1996: 250)로 나아가기 이르렀다. 항상 의도가 좋았다는 파생상품의 창조, 즉 위기와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의도된 파생상품의 미시적 합리성은 새로운 첨단기술의 알고리즘과 결합하면서 오히려 파괴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공학에 대한 절대 안전신화는 무너졌다. 펠릭스 로하틴(Felix Rohatyn)은 “이 잠재력은 연쇄작용을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있게 한다. 세계금융시장은 차라리 원자력 무기보다도 사회안정의 측면에서는 더욱 위협적이다.”고 하였다(Michiko Kakutani, 2009). 이 모든 것은 화폐가 자립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형성하면서 가장 첨단기술로 빠르고 넓게 세계를 확장해 나아가 간 귀결이고 자본 축적 자체를 위기에 빠뜨려 일국경제 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4. 양적 완화와 불평등 문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의 극복은 통화주의의 양적 완화와 국민의 사회안전망 제공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양적완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양적 완화의 문제가 단순히 달러의 양을 많이 제공하는, 즉 매개물의 과잉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 즉 양극화를 양산하는 것임을 보고자 한다.

##### (1) 금융위기 극복의 두 가지 길 - 양적 완화와 사회안전망의 제공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변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유례없는 양적 완화로 해결되는 듯 했다. 금융위기는 통화주의의 금리통화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노정하였다.

통화주의자들은 부유층과 대자본가들이 이익을 볼 때는 철저히 국가의 간섭을 배제했으나 그들이 손해를 보고 위기에 빠지자 정치적 특혜를 입었다. 이러한 특혜를 막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Occupy the Wall Street”와 같은 시위를 벌이고 민주당 등에 청원을 넣었으나 의회는 막후의 조정에 의해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긴급구제자금을 위해 연준은 대폭 통

화량을 늘리기로 하고 양적 완화를 실시하였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양적 완화는 '손실의 사회화'를 통한 극복이다. 양적 완화는 단순히 통화량을 늘리는 것일 뿐인 것이 아니라 그 '손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금융위기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시민 생활을 먼저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이슬란드의 경우이다. 금융위기 직전 아이슬란드 3대 은행의 총 부채는 약 200조원에 달하였고, 이는 아이슬란드 GDP의 11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아이슬란드 3대 국영 은행이 모두 파산하자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가 부도를 선언하였다. 국민 1인당 감당해야 할 채무가 5억 원이었다.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국회 앞에서 거센 대정부 시위를 벌이면서, 이러한 위기를 정책과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표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상환요구를 거부한다면 경제적 고립 및 신용등급 강등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그림슨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 사기업이 탐욕으로 저지른 일을 아이슬란드의 평범한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국민투표에 부쳤다. 1, 2차 투표에서 구제금융안이 반대 93%로 부결되었고, 경제 붕괴의 책임에 대해 단호한 조사를 실시해 은행가들과 정치가를 감옥에 보냈다. 기업의 파산에 대한 조치는 최소화 하는 대신 일반 시민들의 개인 파산을 막기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에 힘쓰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하였다.

## (2) 양적 완화의 두 가지 길

양적 완화는 돈을 찍어내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통화주의적 정책이지만 자세히 보면 역시 권력관계와 위기의 계급적 이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해진 상태에서 덮친 코로나19사태는 은행과 기업만이 아닌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도 고려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양적 완화는 미국 연준이나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국채, 국공채,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여 통화량을 늘려 시중 은행에 화폐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금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 하던 방식과 다르게 기준금리가 0%인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어려울 때 직접 통화량을 늘리는 통화정책이다. 프리드먼의 통화주의가 철저히 이루어진 사례이다. 이 양적 완화는 시중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산버블과 자산불평등으로 나아갔다. 계층과 세대에 따라 경기 회복의 온도가 다르다. 기업의 투자증대와 실물경제의 회복, 가계의 소득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2020년 상반기부터 풀린 천문화적인 양적 완화는 엄청난 자산버블과 자산불평등을 초래하면서 급기야 무자산층 뿐 아니라 청년층의 빈곤화를 가속화시켰다.

이와 달리 소액이긴 하지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조금 다른 성격의 양적 완화가 있다. 그것은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QE for People) 혹은 헬리콥터머니이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직접 돈을 찍어내 시중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양적 완화를 하는 것으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이 양적 완화는 대규모 양적 완화에 비해 지극히 적은 양이지만 모세혈관에 피를 공급하는 것과 같이 대다수 서민들의 삶의 순환을 돌리고 그들의 생계를 지지한다. 그 방식은 중앙은행이 찍은 돈을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씩 계좌로 입금해 주거나, 유효기간이 명시된 상품권을 배포해 단시간 내 소비를 활성화시키거나 정부에 직접 돈을 준 후 재정 정책에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로는 6월에 시행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다. 미국도 코로나19사태에서는 극히 제한적

이긴 하지만 헬리콥터 머니로서의 양적 완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는 통화량 조절하는 통화주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개입하는 재정정책으로 일종의 민중 ‘구제’이다. ‘양적’이라 할 정도로 ‘양적’이지도 못할 뿐이며 이에 ‘양적 완화’라는 언어는 사실상 부적절하다.

### (3) 2008년 이후 양적 완화와 불평등의 문제

통화주의를 비롯한 주류경제학의 마지막 처방인 양적 완화가 불평등을 완화 혹은 심화시켰는지에 대해 상반된 관점들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간 총 6조 7500억 달러가 풀렸다. 이러한 양적 완화를 통해 부동산과 주가 등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입장과 자산 가격도 오르고 경기가 회복된 듯 보이지만 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대체로, 자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그 과실을 독식해 사회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양적 완화는 불평등 심화나 신용위기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보자. 통화주의자들은 양적완화와 금리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보르도(Michael Bordo)와 크리스토퍼 마이스너(Christopher M. Meissner)는 "불평등이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키는가?"("Does Inequality Lead to a Financial Crisis?")에서 저금리와 경제적 팽창의 문제가 신용버블의 유일한 두 가지 틀림없는 결정요인이기는 하나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는 않았다고 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채권 매입 등을 통해 1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시중에 푸는 양적완화 정책은 금융위기 극복과 함께 세계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달러의 평가절하로 미국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좋아졌고 수출도 좋아졌다고 본다. 또한 연준이나 중앙은행은 물가안

정과 금융기관의 규제와 감시에 그 본연의 임무가 있으므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그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문제라고 한다.

양적 완화를 통하여 경제회복을 보이던 미국경제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봉쇄정책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하게 되고 다시금 가공할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다. 특히 2021년 3월 미국인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 명명된 1조 9000억 달러 부양책이 통과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간 풀린 돈만큼이나 많은 돈을 코로나19사태 이후 아주 단기간에 풀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플레이와 자산버블을 막기 위해 양적 긴축을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

통화주의자들의 입장과 달리 양적 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확대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양적 완화가 실제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 우선 자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양적완화는 낙수(落水)효과를 노린 정책인데 실제로는 돈이 풀려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혜택은 부유층에만 집중되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2016). 그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면 양적완화나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주식시장 버블(거품) 혜택을 충분히 보겠지만 보유株式이 적은 소득 하위 80%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상위 1%가 압도적으로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세대에 따른 불평등이 매우 심하다는 주장을 보자. 자산을 많이 가진 부자나 고소득 노장년층에 비해 저자산 혹은 무자산의 청년세대는 매우 불리하다. 세대별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조사는 연방준비위원회가 2018년에 펴낸 『부의 인구분포도: 교육과 인종, 출생년도가 금융자산을 어떻게 형성하는가』(*The Demographics of Wealth: How Education, Race and Birth Year Shape Financial Outcomes*)이다. 이 책에 있는 8쪽의 표를 보면 가장의 연령에 따른 순가치의 증식이 거의 정의 비례를 보이고



있다. 빈곤한 사람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가장 불리한 이유는 아직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을 구축하지 못한 그들이 금리인하에 따른 자산가격의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화, 자동화, 노동조합의 약화, 노동의 유연성 등 때문에 비정규직에다 실질소득의 감소를 예상한다는 것과 더구나 주거비와 학자금 대출 때문에 소득에 비해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양적완화는 결국 금리인하로 자산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자산소득 비율이 높은 부유층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이 가는 걸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아이슬란드 방식으로 민중구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IV. 마무리: ‘화폐의 민주화’, 그리고 ‘좋은 삶’

자유교양교육은 루이스 교수가 주장한대로 자신의 합리적 이기심이나 극소수 상류층의 자산 가치와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다수가 함께 사는 공존의 삶에 대한 시각에서 현실경제와 화폐금융에 대해 큰 질문을 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경제학적 분석에 이어 제기되는 것은 ‘화폐의 민주화’와 ‘좋은 삶’에 관한 것이다. ‘화폐의 민주화’는 현행 화폐금융제도에 대한 분석과 비판만으로는 볼 수 없는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고 ‘좋은 삶’은 제도를 넘어서 개인적 절제와 성찰을 필요로 한다.

1970년부터 2007년까지 600여회 일어난 각종의 금융위기는 신고전주의 이론과 통화주의 등 주류경제학의 화폐금융이론이 바탕이 된, 국가의 재정정책과는 독립하여 이루어진 연준 중심의 통화정책에서 비롯된다. 이런 위기상황은 항상 국가의 개입, 즉 구조금융으로 극복되었으며 금융자본은 항상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국가의 정책을 ‘손실의 사회화’, 즉 자신들의

채무를 국유화하게 함으로써 위기에 벗어나곤 했다. 이것은 국가권력과 금융자본과의 결합으로 국민 대다수가 소외되는 비민주적 상황이다.

이런 비민주적 상황을 볼 때 ‘화폐의 민주화’ 문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국가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통화주의와 케인즈주의 논쟁을 넘어서 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대안을 상상하도록 한다. 화폐 발행권의 독점이나 이자떨린 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등은 탈중앙화나 지역적 발행의 이원화, 감가화폐 등 대안화폐를 고찰하도록 한다.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연대가 일어나고 있는 ‘화폐민주주의연대’의 움직임도 교육 주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화폐와 금융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좋은 삶과 돈’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자본주의에서는 경쟁도 역시 세계화된다. 모든 층에서 학벌, 재산, 소비, 명예, 권력 등에 대한 경쟁과 욕망이 세계화된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은 모두 ‘돈’에 대한 추구로 모아진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기준이 재산밖에 없고 그 끝없는 위세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김찬호, 2014: 233).

홍기빈은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에서 주류경제학의 시장경제학을 돈벌이 경제학으로 부른다. 돈벌이 경제학에서 보는 경제란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닥치게 되는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뜰하게 선택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경제적 부, 즉 돈이다. 이 돈벌이 경제학에서 가장 심각한 점은, “돈 버는 데에 수단이 되는 삶 말고는 삶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 그래서 인간의 삶은 오로지 돈을 벌고 쓰는 ‘삶’만이 남게 된다. 결국, 삶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점이다(2012: 157). 그래서 돈벌이 경제학에서 살림/살이 경제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물질적 풍족이나 감각의 만족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중히 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까지 풍부하게 실현되는, 그래서 자신의 머리에 깃든 신성이 극도로 활성화되는 삶이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명료하게 제시했던 바로 '좋은 삶'의 영역이다. 그리하여 호모 이코노미쿠스적 에토스(돈벌이 경제학)에서 벗어나 좋은 삶을 추구하는 인문적 인간의 탄생에 대해 예비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이윤추구'가 유일무이한 목적이 되는 기존의 신고전주의나 통화주의를 비롯한 주류 경제학만이 아닌 여러 관점의, 다원주의적 경제학개론이 필요하다.

전공교육의 목표가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획득으로 삶의 도구적, 실용적 성격이 강하다면, 자유교양교육은 바람직한 삶 혹은 좋은 삶과 관련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하여 주변 세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새로운 상상력으로 삶의 방향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성찰적 성격이 강하다. 경제 관련 교양교육은 기초필수인 전공기초로서 다원주의적 경제학원론 수업과 자유교양교육으로서의 화폐금융교육이 더해진다면 훨씬 풍요로운 교육과정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구춘권, 2000, “화폐적 축적의 자립화: 포드주의의 위기와 국제금융시장의 팽창”, 『한국정치학회』, 34(3), pp. 293-312.
- 구춘권, 2009,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화폐론과 금융위기”, 『마르크스주의』, 6(4), pp. 191-220.
- 김상규 외, 2013, 『알기쉬운 경제학』, 형설출판사.
- 김정규, 2012,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BOK 경제리뷰』, 2012-2, pp. 1-34.
- 김준태, 2014, “교양경제교육 효과향상을 위한 문제기반학습 방안”, 『교양교육연구』 8(6), pp. 675-726.
- 김찬호, 2014, 『모멸감-존엄과 굴욕의 사회』, 문학과지성사.
- 도정일, 2014,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이란 무엇인가,” 한겨레신문, 2014. 2. 20.,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5105.html>
- 박명호, 2001, “경제학은 딱딱한 학문이어야 하는가”, 『경제학연구』, 49(4), pp. 339-356.
- 백성진, 김진욱, 2012, 『금융의 배신』, 맛있는책.
- 서남수, 2013, “한국대학 교양교육의 구조적 난점과 과제”, 『교양교육연구』 4(2), pp. 1-18.
- 성효용, 2003, “합리적 선택을 위한 경제교육”, 『경제교육연구』, 10(1), pp. 1-17.
- 신준호, 2005,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이론 연구: 아마티아 센의 비판과 한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현효, 2005, “경제교육의 관점에서 본 경제학교육”, 『경제교육연구』, 11(1), pp. 177-195.
- 안현효, 2013, “탈자폐경제학과 대안적 경제교육 교육과정 -다원주의 접근의

- 사례 분석 -”, 『경제교육연구』, 20(1), pp. 67-89.
- 윤채현, 2013, 『당신을 위한 경제학은 없다-아무도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다』, 더난출판사.
- 이승욱, 2013, 『포기하는 용기』, 쌤앤파커스.
- 이태수, 1996, “대학 교양교육의 이념”, 『대학개혁의 과제와 방향』, 김남두, 김영식 엮음, 민음사.
- 장하준, 2014, 『장하준의 경제학강의』, 김희정 옮김, 부키.
- 조지프 스티글리츠, 2016, “양적완화-마이너스금리 부의 불평등만 심화시켜”, 동아일보, 2016. 04. 1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428/77821458/1>.
- 제윤경, 이현옥, 2012, 『약탈적 금융사회』, 부키.
- 최병모, 김정호, 이준혁, 2005, “학교 경제교육 방향 탐색을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 『경제교육연구』, 12(1), pp. 53-83.
- 최종민, 2011, “공통경제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제교육연구』, 18(2), pp. 1-26.
- 카와무라 아츠노리 외, 2013. 『엔데의 유연』, 김경인 옮김, 갈라파고스.
- 한영빈, 2008, “금융불안정과 정치적 통제의 중요성: 후기케인즈주의의 정치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2), 한국정치학회, pp. 241-262.
- 홍석만, 송명관, 2013, 『부채전쟁』, 나뭇잎스.
- 허원재, 2015,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 그리고 그 위험성”, KERI FACTS, 2015-06-01, 한국경제연구원, pp. 1-4.
- 홍기빈, 2012,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지식의날개.
- Aglietta, Michel(2008). *La crise : Pourquoi en est-on arrive la?*, Comment, Michalon (서익진 역(2009)). 『위기 왜 발발했으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올아카데미.

- Altwater E, 2001, "The Growth Obsession", *Department of History, International and Social Studies*, Aalborg University, file:///C:/Users/1/Downloads/DIR\_wp\_101.pdf
- Altwater E, 1997, "Financial Crises On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Socialist Registry* 33, pp. 48-74.
- Bordo, Michael and Christopher M. Meissner, 2012, "Does Inequality Lead to a Financial Crisis?", *NBER*.
- Colander, David and KimMarie McGoldrick, 2009, "The Economics Major and Liberal Education", *Liberal Education*, 95(2).
- Colander, David and KimMarie McGoldrick(2009). "The Economics Major as Part of a Liberal Education: The Teagle Report", *AMERICAN ECONOMIC REVIEW*, 99(2), pp. 611-18.
- Cooper, George, 2008, *The Origin of Financial Crises: Central Banks, Credit Bubbles, and the Efficient Market Fallacy*, Vintage Books(김영배 옮김, 2009, 『민스키의 눈으로 본 금융위기의 기원』, 리더스하우스).
- Faculty of Arts and Sciences, 2007, *Report of Task Force on General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http://projects.iq.harvard.edu/files/gened/files/genedtaskforcerreport.pdf?m=1448033208>
- Federal Reserve Bank, 2018, *The Demographics of Wealth: How Education, Race and Birth Year Shape Financial Outcomes 2018 Series*,  
[https://www.stlouisfed.org/~media/files/pdfs/hfs/essays/hfs\\_essay\\_2\\_2018.pdf?la=en](https://www.stlouisfed.org/~media/files/pdfs/hfs/essays/hfs_essay_2_2018.pdf?la=en)
- Friedman, Milton, 1994, *Monetary Mischief: Episodes in Monetary History*, Mariner Books Reprint edition (김병주 옮김, 2009, 『화폐

경제학』, 한국경제신문사).

Greenspan, Allan, 2001,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and literacy", *BIS Review*.

Grignon, Paul, 2008, Money as Debt, Documentary, paulgrignon.com.

Heinberg, Richard, 2011, *The End of Growth : Adapting to Our New Economic Reality* (노승용 옮김, 2013, 『제로성장 시대가 온다』, 부키).

Keyns, J. M. 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The ISN.

Kennedy, Margrit, and Ehrenschwendner Stephanie, 2011, *Occupy Money -Damit wir zukünftig ALLE die Gewinner sind*, Kamphausen (황윤희 옮김, 2013, 『화폐를 점령하라』, 생각의길).

Kindleberger, Charles P. and Robert Z. Aliber, 2005, *Manias, Panics and Crashes: A History of Financial Crises*, Palgrave Macmillan (김홍식 옮김, 2006,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굿모닝사).

Kumhof, Michael and Romain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Lazzarato, Maurizio, 2011, *La Fabrique de L'homme Endette*, Essi Sur La Conition NeoLiberale (허경양진성 옮김, 2012, 『부채인간』, 메디치).

Lewis, Harry, 2006, Excellence without a soul, Public Affairs.

\_\_\_\_\_, 2012. *The Moral Mission of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의 새로운 비전: 탁월성과 도덕성의 추구』, 동산포럼, 계명대출판부.

Mankiw, Gregory, 2006, "The Macroeconomist as scientist and engineer",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o. 12349, pp. 1-26.

Michiko Kakutani, 2009, "Books of The Times: Greed Layered on Greed,

- Frosted With Recklessness”, The New York Times, June 05.
- Orlean, Andre, 2011, *L'empire de la Valeur: Refonder l'Economie*, Seuil (신영 외 옮김, 2016, 『가치의 제국-경제학의 토대를 다시 세우기』, 울렛).
- Patel, Raj, 2009, *The Value of Nothing: How to Reshape Market Society an Redefine Democracy*, Picador USA (제현주 옮김, 2012, 『경제학의 배신』, 북돋음).
- Pinker, Steven et al., 2011, *The Harvard Sampler: Liberal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Harvard Univ Pr. (이창신 옮김, 2012, 『하버드 교양강의』, 김영사).
- Robbins, Lionel, 2007, *An E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Ludwig von Mises Institute (이규상 옮김, 2019,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지닌 속성과 중요성』, 지만지).
- Siegfried, J. J., R. L. Bartlett, W. L. Hansen, A. C. Kelley, D. N. McCloskey, and T. H. Tietenberg, 1991, “The status and prospects of the economics major”,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2(3), pp. 197-224.
- Simmel, Georg, 2011, *Die Philosophie Des Geldes*, Nobel Press (김덕용 옮김, 2013, 『돈의 철학』, 한길사).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2010, *Mismeasuring Our Lives: Why GDP Doesn't Add Up*, New Pr. (박형준 옮김, 2011, 『GDP는 틀렸다』, 동녘).
- Wallas, Leon, 1938, *Elements D'economie Politique Pure*, R. Pichon et R. Durand-Auzias (심상필 옮김, 1996, 『순수경제학 - 순수 부에 관한 연구』, 한길사).
- 今村 仁司, 1994, 貨幣とは何だろうか (ちくま新書), 筑摩書房 (이성혁, 이혜진 옮김, 2011, 『화폐인문학』, 자음과모음).



## ABSTRACT

### Critique of Mainstream Economics Theory and Necessity and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on Currency and Finance

Kim, Bong Youl

Dongguk University WISE Education Center for Cultural Convergence  
(Assistant Professo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learly showed how unrealistic the possibility of solving problems through rational decision-making or judging economic problems based on existing mainstream economics theory, especially Neo-Classical economic theory or Monetarism.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innovative demands have been reached. This article intends to set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education on currency and finance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s of liberal arts education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Principle of Economics that summarizes mainstream economics theory. Liberal arts education criticizes the existing mainstream economics theory considering 'money' only as a medium of commodity exchange, and reflects on money as a core institution that sets the foundation for social values and community relations. Another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s toward how to reconsider 'democratization of money' and 'a good life'

Key-words: liberal arts education, critique of mainstream economics theory, Currency and Finance

\* 투고일: 2022년 11월 13일, 심사일: 2022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11일.